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15
----------	------

2021년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은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전문성, 경험, 인적·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공공기관에 공기관 위탁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나. 위탁유형 : 사무위탁(공기관 위탁)

다. 위탁기간 : 3년(2022.3. ~ 2025.3.)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삭제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이 있는 인력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에 공공성이 수반되어 공공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위탁사무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 그 밖에 시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

바. 위탁사무 개요

- 운영목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지원 추진
- 운영방법 : 공기관 위탁
- 시설규모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199m²
- 인력배치 : 15명(예방환경조성팀 4명, 삭제지원팀 7명, 피해지원팀 4명)

사. 수탁기간 선정방법 : 공기관 신규위탁(공개모집)

아. '22년 소요예산(안) : 1,106백만원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반영 예정

다. 합 의

○ '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10.6.(적정)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이하 “통합지원기관”이라 함)을 위탁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¹⁾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²⁾(신규)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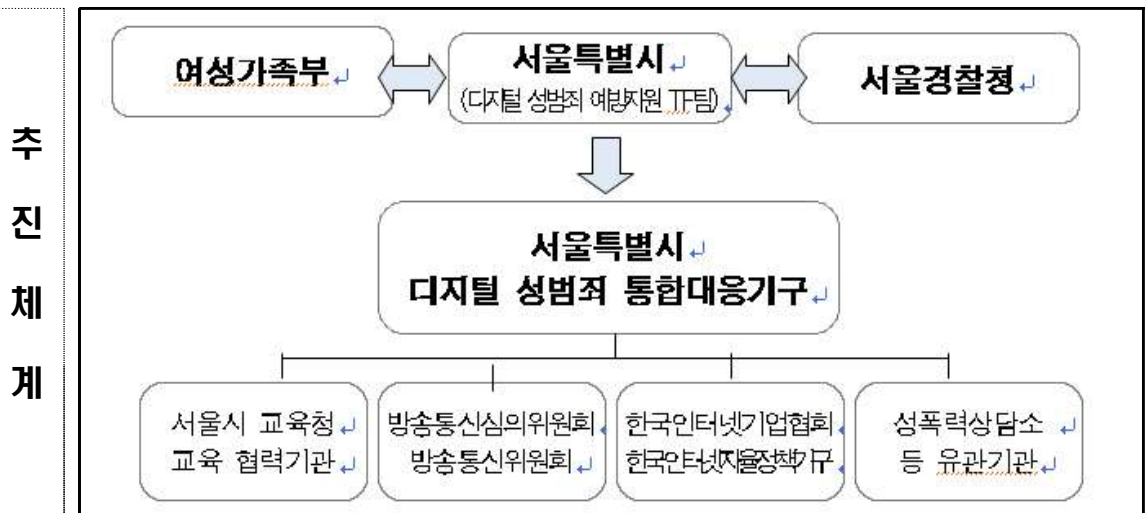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 그 밖에 시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설치·운영 추진방향>

비전 **디지털 성폭력 제로 서울 구현**

방향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기구 설치·운영**

추진 과제	사전예방	조기개입	피해지원
	① 예방교육, 캠페인 운영	① 긴급 신고, 상담 청구 운영	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② 이동 청소년 온라인 괴롭힘 예방	② 삭제기술 개발 및 삭제지원	② 법률 소송지원, 심리치료
	③ 디지털 성범죄 종합 플랫폼 운영	③ 삭제 결과보고 및 안내	③ 피해자 사례관리 시스템



2 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³⁾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디지털성범죄예방조례’)」(제7조⁴⁾)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동 통합지원기관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 「민간위탁조례」 제4조⁵⁾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3)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이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통합지원 기관의 운영은 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디지털성범죄예방조례」(제11조)6)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통합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영상물 삭제지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7)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과 같은 법」제104조제3항8)에 따른 민간위탁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서울시 특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공공 위탁 사무 역시 「지방자치법」제104조를 포괄적으로 인용하는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 6)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11조(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7)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8)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위탁 동의안은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지원 등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띄는 사무를 추진하게 되는 바,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디지털성범죄예방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동 사무의 명칭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바, 이를 조례와 맞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15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은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
-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전문성, 경험, 인적·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공공기관에 공기관 위탁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 나. 위탁유형 : 사무위탁(공기관 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2.3. ~ 2025.3.)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삭제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이 있는 인력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에 공공성이 수반되어 공공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위탁사무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 그 밖에 시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

바. 위탁사무 개요

- 운영목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지원 추진
- 운영방법 : 공기관 위탁
- 시설규모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199㎡
- 인력배치 : 15명(예방환경조성팀 4명, 삭제지원팀 7명, 피해지원팀 4명)

사. 수탁기간 선정방법 : 공기관 신규위탁(공개모집)

아. '22년 소요예산(안) : 1,106백만원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반영 예정

다. 합 의

○ '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10.6.(적정)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안심사업팀 김지현(☎2133-5025)